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12월

전문가 기고

당면한 RE100의 무게감

주요 이슈

COP27 주요 결과 및 시사점

ESG 동향

美 SEC 기후공시안 주요내용

주요 통계



당면한 RE100의 무게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요즘 기업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니셔티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정도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무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중 RE100은 가장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출범하여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이니셔티브의 개념 및 목표가 비교적 단순하여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전력 소비와 재생에너지 조달은 기업 외부에서도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들은 RE100이행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RE100은 선진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27개 기업이 가입하였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가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여건이 불리한 탓에 주저하던 우리 기업들 사이에 RE100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적 의미에서 RE100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동참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8월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대기업은 28.8%, 중견기업은 9.5%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점차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공급망을 포함하는 Scope3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RE100은 근본적으로 자발적 이니셔티브지만 순수한 자발성에 기초하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최근 RE100 이니셔티브에서 기업이 조달하는 재생에너지의 질적 특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

히 재생에너지 실질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영향력의 측면을 강조하여 추가성(additionality)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개정된 RE100 기술적 기준(technical criteria)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되도록 신규발전 설비에서 조달하거나 운영된 지 15년 이내 설비에서 전력이나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는 조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수력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는 까다로운 환경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은 북미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는 갖춰진 상황이지만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충분한 물량 확보 가능성에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편이고 좁은 국토나 많은 인구 등으로 보급 환경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 기대어 RE100 이행을 지체하기에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된 글로벌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이점을 종합한다면 우리 기업은 RE100에 지금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행 수단도 점차 추가성이 높은 PPA 등의 수단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은 바꿀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고 기업의 RE100 이행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과 인센티브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의 직접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 조달에 부과되는 부대비용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조달하는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조달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조달 수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의지와 투자, 정책적 인센티브가 잘 조화될 때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을 것이다.

1) 대한상의,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 과제, 2022.8

COP27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박경원 연구위원

COP27은 이행의 총회로 감축, 적응, 자원, 손실과 피해, 에너지, 해양, 농업 등 전 분야에 대한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COP27을 계기로 1.5°C 목표달성과 기후대응 이행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① 주요 결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022년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COP27의 가장 큰 성과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설립에 관한 당사국 간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이 외에도 COP27의 대표결정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인 감축, 적응, 자원, 기술 지원, 역량배양과 함께 에너지, 손실과 피해, 조기경보, 정의로운 전환, 해양, 산림, 농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이번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가 첫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개도국 지원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과 자원 지원체계 수립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설립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고, 향후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기금조성과 자원확장 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 하였다.

[감축 (Mitigation)]

당사국은 대표결정문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한선인 '1.5°C' 목표치를 재확인 하였다(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의 43% 감축).

향후 감축 작업프로그램(MWP, mitigation work program)을 운영하고('23~'26년), 별도 대화체를 통해 감축방안·기술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 하였다. 감축성과 진전 방향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이 대립하였는데, 선진국은 목표상향과 이행력 제고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자원과 기술지원 강화를 주장 하였다. 2025년 배출정점 달성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에 관한 내용은 대표결정문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적응 (Adaptation)]

적응부문에서는 기후금융, 기술이전, 적응역량 배양을 통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확대가 더욱 강조되었다. 글로벌 적응 목표(GGA, global goal on adaptation) 달성을 위한 프레임 워크 설치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의가 도출 되었다. GGA 평가 방법론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프레임 워크의 세부 운영방식은 차기 당사국총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자원 (Finance)]

자원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net zero emissions)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자원조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 연간 4조 달러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자원조성 목표(연간 1천억 달러) 달성을 촉구하였다(COP15·16·21 합의 내용).

[에너지 (Energy)]

에너지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배출·재생에너지 (low-emission and renewable energy) 증대,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mix)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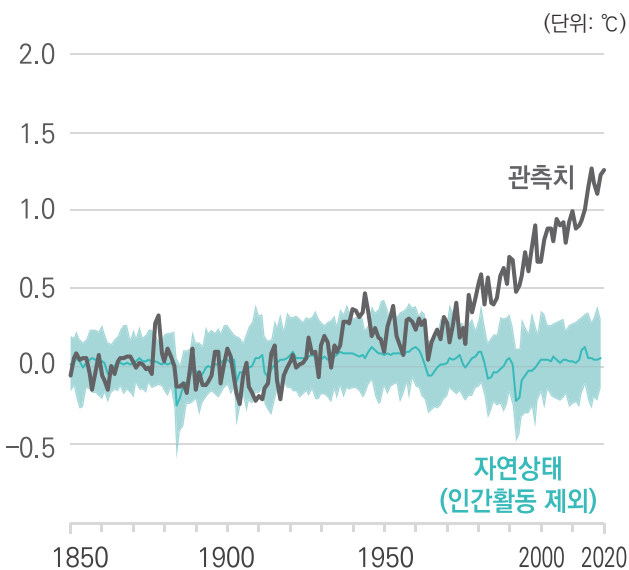
② 시사점

이번 COP27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가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감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손실과 피해, 책임과 지원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손실과 피해와 함께 실질적인 감축성과 진전을 위한 재원조달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당사국들은 COP26에 이어 COP27에서도 NDC 달성만으로는 1.5°C 상승목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고, 배출격차(emission gap)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COP27은 정책의 수립보다 이행(implementation)을 강조했던 총회로서 COP27을 계기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선언, 서약, 공약은 실질적인 이행의 단계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전 세계는 본격적인 NDC 이행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도 NDC 이행의 속도와 방향을 재점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합리적인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배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할 국제사회의 국내 탄소 감축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국가,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 변화



자료: IPCC AR6 WG I (2021), IPCC AR6 WG III (2022)

배출 격차(emission gap)

1850-1900년 대비 2010-2019년 온도 변화	1.07°C 상승
1.5°C(2°C) 목표달성까지 남은 배출량 (remaining carbon budget)	500(1,150) GtCO ₂
배출 격차*(emission gap) <small>*NDC상의 목표배출량과 1.5°C(2°C) 목표달성을 위한 배출량의 차</small>	매년 19~26(10~16) GtCO ₂ 추가 감축

자료: IPCC AR6 WG I (2021), IPCC AR6 WG III (2022)

美 SEC 기후공시안 주요내용



박현준 연구원

'22.3월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동 규칙안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은 기후충격 리스크 및 영향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사업보고서 혹은 증권신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적용 대상이므로 SEC 공시 규칙안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22.3월 미국 증권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상장기업의 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안」을 제안했다. 동 규칙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기후관련 사업운영 정보(기후변화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연간 사업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혹은 증권신고서에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 섹션을 생성하고, 장·단기 동안 발생가능한 기후 위험이 기업에 미칠 영향 및 위험도에 대해 분석·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후 관련 위험은 크게 물리적위험(Phy-sical Risk)과 전환위험(Transition Risk)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위험은 지진·홍수 등 일시적 기상이변인 급성위험(Acute Risk)과 해수면 상승·고온현상 등 장기적 기상이변인 점진적 위

험(Chronic Risk)으로 분류된다.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상장기업은 ①기후위험이 사업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②지배구조, ③ 위험관리, ④재무제표 지표, ⑤온실가스 배출량(Scope1·2·3) 지표, ⑥Scope 1·2 배출량 인증을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동 규칙안에는 Scope3 공시가 포함되었기에, 해당 기업은 가치사슬의 업·다운스트림 기업정보를 모두 취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EC 규칙안을 포함하여 최근 IFRS S1·S2, ESRS 등 전세계적으로 기후공시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도 글로벌 정보이용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공시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SEC 기후공시 의무 규칙안의 단계적 이행시기 *

구분	공시 일정		Scope 1&2 인증 시점	
	Scope 1&2	Scope 3	제한적 인증**	합리적 인증***
상장 대기업	'23년 회계연도 정보 ('24년 제출공시)	'24년 회계연도 정보 ('25년 제출공시)	'24년 회계연도 정보 ('25년 제출공시)	'26년 회계연도 정보 ('27년 제출공시)
상장 중견기업	'24년 회계연도 정보 ('25년 제출공시)	'25년 회계연도 정보 ('26년 제출공시)	'25년 회계연도 정보 ('26년 제출공시)	'27년 회계연도 정보 ('28년 제출공시)
상장 소기업	'24년 회계연도 정보 ('25년 제출공시)	'25년 회계연도 정보 ('26년 제출공시)	면제	면제
소규모 보고기업	'25년 회계연도 정보 ('26년 제출공시)	면제	면제	면제

* 규칙안 '22년말 최종 확정·시행 가정
 ** Scope 1·2 공시에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Conclusion)을 제공하며, ESG 공시에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인증수준
 *** Scope 1·2 공시에 중요한 오류가 없다는 의견(Opinion)을 제공하며, ESG 공시에서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시 요구되는 수준
 자료: pwc(2022), DBR(2022) 참고

ESG 통계 지표

2022년 12월 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151	162	172	183	186	188	199	203	201	200	212
사회적채권	794	820	835	871	912	946	966	1,006	1,032	1,045	1,069
지속가능채권	230	233	237	246	279	304	305	309	308	309	300

(2)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156	168	173	183	185	186	191	194	193	193	200
사회적채권	1,273	1,306	1,331	1,362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지속가능채권	175	181	182	186	199	213	217	220	219	218	213

2. ESG 평가

ESG 종합 등급 부여 현황(KCGS 등급자료 기준)

(단위 : 개사)

등급		S	A+	A	B+	B	C	D	합계
기업수	'22	-	5	117	124	76	195	256	773
	'21	-	12	170	134	209	225	12	762
	'20	-	16	92	133	257	235	22	755

자료: KRX ESG포털

3. 기타 통계

연도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 기업수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한국 지지 기업수	-	4	3	12	70	61	150
글로벌 지지 기업수	281	298	397	732	1,254	1,113	4,075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7월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8월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9월	순환경제의 부상과 구축 동향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10월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전과 기회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11월	ESG 채권시장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12월	COP27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COP27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박경원 연구위원

T. (02)6050-3134 | E. kwpark@korcham.net

美 SEC 기후공시안 주요내용

박현준 연구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

ESG 통계 지표

박현준 연구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